

제1080호 2026. 10. 23.

건설동향

BRIEF_{ing}

글로벌 주요 도시의 도시·주택 연계 정책과 개발 전략

- 주택과 도시계획 정책의 통합을 통한 주택공급 문제 대응
- 뉴욕은 개발 유연성을 확대하고, 런던은 주택공급을 도시계획의 핵심 목표로 설정
- 주택공급 정책을 넘어 도시공간 재편을 통한 공급 확대 전략으로 전환 필요

캐나다의 대형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체계와 시사점

- 캐나다, 대규모 건설사업의 신속 추진 및 통합적 조정기구 'MPO' 신설
- PwC,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시스템 관점의 포트폴리오 관리 제안
- 차기 국가 핵심 성장동력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시스템 관점의 종합적 추진 및 관리체계 필요

산업 전환기, 건설인력 재교육 강화 필요

- 유럽 건설산업,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보 시급
- 역량 보완이 시급한 직종 중심의 인력 확보와 기존 인력의 미래 핵심 역량 강화 추진
- 국내 건설인력 재교육 체계 개선 및 산업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필요



글로벌 주요 도시의 도시·주택 연계 정책과 개발 전략

- 뉴욕, 런던 등에서 주택공급 문제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대응 전략 추진 -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주택과 도시계획 정책의 통합을 통한 주택공급 문제 대응

- 최근 뉴욕, 런던 등 글로벌 주요 도시의 도시개발 전략에서 주택 문제는 단순한 주거복지나 공급 정책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높은 주거비와 부담가능한 주택의 부족이 인구와 인재의 유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장거리 통근과 교통 부담, 지역 간 불균형 등 도시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신규 택지개발이나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공간의 용도와 밀도를 조정하고 저이용 토지와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등 이미 형성된 도시공간의 주택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음.
-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디에, 어떤 주택을, 어떠한 도시환경과 함께 공급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주택의 부담가능성, 일자리·교통·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직주근접과 용도혼합, 노후 건축물과 기존 주택스톡의 재생, 기후대응과 공공공간의 질 등이 주택공급과 함께 고려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용도지역·밀도·주차 등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개발 인센티브를 부담가능 주택과 기반시설 공급에 연계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음.



뉴욕 : 도시 전체를 더 유연하게 개발

- 뉴욕의 최근 도시개발 전략은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여 도시 전체의 용도지역제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고 전략지역은 별도의 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24년 12월 승인된 「City of Yes for Housing Opportunity」는 1961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zoning 개혁 중 하나로 향후 15년간 약 8만 호의 추가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조금씩 더 많은 주택’을 허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도시 전체에 대하여 개발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가능성을 확대하는 도시 전역 용도지역제 개편(Citywide Zoning Reform)을 추진하는 한편, 변화가 필요한 전략지역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Neighborhood Planning & Rezoning)을 통해 고밀·복합개발과 부담가능주택, 공공인프라 공급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City of Yes’의 핵심은 개별적인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용도지역 규정(Zoning Resolution) 자체를 개편하여 도시 전반의 주택수용 능력을 높이는 것임.
 - 중·고밀 주거지역에서는 영구적인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할 경우 추가적인 주거밀도를 허용하는 보편적 부담가능성 우대제(Universal Affordability Preference, 이하 UAP)를 도입함.
 - 역세권에서는 중규모 공동주택을 추가로 허용하는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이하 TOD), 상업가로에서는 저층부 상업시설과 상부 주택을 결합하는 지역 중심지 용도지역제(Town Center Zoning), 저층주거지역에서는 부분임대형 주택(Accessory Dwelling Unit, 이하 ADU)¹⁾을 허용하는 등 공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추가적인 개발밀도를 수용하고 있음.
 - 모든 지역을 일률적으로 고밀화하기보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금씩 추가적인 밀도를 허용하는 차등적·점진적 고밀화를 도시 전체의 용도지역제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뉴욕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개발밀도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기존 저밀지역에서도 지하철이나 철도역 주변에 중규모 공동주택을 허용하며, 주택 건설 시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함.
 - 모든 역세권을 초고층화하기보다 기존 지역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주택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Missing Middle’²⁾ 방식의 TOD에 가까움.
 -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주택건설 시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가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실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감소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있음.
 - 즉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차공간에 대한 요구를 줄이는 대신 주택 수용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교통정책과 주택정책을 연계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업무공간 수요와 심각한 주택 부족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업무

1) 기존 단독주택 필지 내 별채 건설, 차고·지하층의 주거용 개조를 허용하되, 주거 품질 유지를 위해 최대 면적을 800sqft(약 74.3 m²)로 제한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 없이 주거 단위를 추가함.
 2) 단독주택과 대형 아파트 단지로 양극화된 시장 내에서, 중간밀도(Duplex, Fourplex, Townhouse 등) 주택을 복원하여 중산층 및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

시설의 주택 전환(Office-to-Residential Conversion)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과거에는 건축연도와 지역 등 용도지역상의 제약으로 인해 주택전환이 어려웠던 업무 건물이 많았으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 등을 결합하여 기존 업무시설의 주거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 뉴욕주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467-m조에 근거한 상업시설의 주거전환 세제지원(AHCC : Affordable Housing from Commercial Conversions)이 활용되고 있음. 기존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일정 비율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임.
-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이용률이 낮아진 오피스를 아파트로 전환하여 주택물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기능에 편중되어 있던 도심에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단일용도 도심(Single-use CBD)을 주거·업무·상업 등이 공존하는 복합용도 도심(Mixed-use CBD)으로 전환하는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City of Yes’가 도시 전체의 기본적인 토지이용 규칙을 개편하는 정책이라면 지역계획(Neighborhood Plan)은 특정 지역의 도시구조를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드타운 사우스 복합용도 계획(Midtown South Mixed-Use Plan)은 뉴욕의 최근 도시개발 방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존 업무·상업·제조 중심의 미드타운 사우스를 주거·업무·상업·경공업·공공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24시간 복합도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5년 8월 승인된 계획을 통해 약 9,500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가운데 최대 약 2,900호를 소득제한 부담가능 주택으로 확보하는 한편, 의무형 포용주택 제도(Mandatory Inclusionary Housing)³⁾을 이 지역에서 처음 적용하였음.
- 또한 ‘City of Yes’를 통해 마련된 R11·R12 고밀 주거지역을 최초로 적용하여 각각 최대 주거 FAR 15와 18까지 허용하는 등 기존 업무중심지의 주거수용 능력을 크게 확대하였음.

런던 : 주택공급을 도시 공간계획의 핵심 목표로 선정

● 런던의 최근 도시개발 전략은 주택위기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시공간계획의 핵심 목표로 전면 배치하고, 도시 전체의 개발용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현재 의견수렴⁴⁾ 중인 ‘런던계획 2026(안)’은 2027~2036년 약 55만 8천 호의 신규주택 공급을 계획하는 한편, 정부가 제시한 약 85만 호의 주택수요를 가능한 한 빠르게 충족하고자 함.
- 주택정책을 별도의 공급정책으로 다루기보다 토지이용과 교통, 경제성장, 환경 및 기반시설 정책과 결합

3) 주택 개발 시 일정 비율을 소득 기준에 따른 부담가능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4) 2026년 10월 15일까지 의견수렴 예정.

하고 있으며, 도시 전반에서 추가적인 개발용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성장과 연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런던은 기존의 개발기회지역(Opportunity Area)을 기개발지 우선 개발기회지역(Brownfield First Opportunity Area, 이하 BFOA)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기존 시가지와 저이용 토지를 대규모 주택 및 일자리 공급의 우선적인 성장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개발기회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일자리를 공급할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과 기반시설 투자를 대규모 도시개발과 연계해 온 제도이며, ‘런던계획 2026(안)’에서는 이를 기개발지 우선 원칙에 명확하게 결합하여 30개의 BFOA를 제시하고 있음.
- 이들 지역에서는 개별 사업지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과 일자리 공급량, 교통,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개발 장애요인, 공공기여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런던의 개발밀도 정책은 단순한 고밀화보다는 토지와 개별 부지가 가진 개발용량을 최적화(Optimisation)한다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 기존 런던계획에서도 기개발지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설계 중심의 접근을 통해 적정 개발용량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런던계획 2026(안)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용량 최적화 기준(Optimisation Framework)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초고층 건축물은 제한된 전략지역에 집중시키는 한편, 일반지역에서는 중층 건축 등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개발밀도를 높임으로써 획일적인 고층·고밀개발이 아닌 지역여건과 도시공간의 질을 고려한 적정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임.

-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택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작은 부지 및 기존 교외 주거지역을 활용한 소규모·분산형 주택공급을 중요한 개발전략으로 확대하고 있음.

- 특히, 0.25ha 미만의 소규모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026년 공개된 런던 소규모 부지 설계기준(London Small Site Design Code)을 통해 런던 전역에 적용할 공통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택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온라인 쇼핑 확대와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기존 상업 기능만으로는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중심지(Town Centre)와 중심상업가로(High Street)를 새로운 주택공급 및 도시기능 집약의 공간으로 재편하고 있음.

- 기존의 상업 중심지를 주택과 소매·서비스·커뮤니티시설·공공공간 등이 결합된 지역생활거점으로 전환하고, 기존 상업기능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 이는 도시 외곽에 새로운 주거지역을 조성하기보다 이미 교통과 생활서비스가 갖추어진 기존 중심지의 토지이용을 보다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산업용지를 주택공급을 위해 전면적으로 해제하거나 기존 용도를 그대로 보존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일부 산업용지를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 전략적으로 필요한 산업용지는 지속적으로 보호하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토지이용을 보다 효율화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과 다른 도시기능을 혼합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편을 검토하고 있음.
- 런던계획 2026(안)에서는 기존 개발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주택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일부 그린벨트(Green Belt)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그린벨트(Green Belt)를 광범위하게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철도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입지를 선별하여 새로운 주거 성장지역으로 활용함.
- 이를 통해 개발과 함께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생물다양성 순증(Biodiversity Net Gain) 등의 환경적 가치를 확보하려는 의도임.

시사점 : 주택공급 정책을 넘어 도시공간의 재편 전략으로 전환 필요

- 주택 문제를 단순한 주택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간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뉴욕은 도시 전체의 용도지역제 혁신과 지역단위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저층주거지·역세권·상업지역·업무지역·산업지역별로 주택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있음.
- 런던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기개발지, 역세권, 지역 중심지, 소규모 부지, 산업용지 등 기존 도시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개발용량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주택의 공급량뿐 아니라 부담가능성, 일자리와 교통 접근성, 직주근접, 생활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이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공급 정책을 택지 확보와 개별사업의 공급물량 확대에 집중하기보다 도시 전체의 토지이용과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장기적인 도시전략의 일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획일적인 용도지역과 용적률 체계에서 벗어나 공간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유연한 도시계획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도심복합개발 등 다양한 정

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사업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통해 단기간에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 반면 뉴욕은 저층주거지에서는 소규모·점진적 주택 증가, 역세권에서는 중·고밀 개발, 업무지역에서는 주거전환과 복합화, 산업지역에서는 생산기능과 주거기능의 혼합 등 공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런던 또한 도시 공간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개발밀도를 결정하고 있음.

● 향후 주택공급은 신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에 더해 이미 형성된 도시공간에서 추가적인 주택 수용능력(Housing Capacity)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급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뉴욕도 ADU, 역세권 중밀개발, 상업가로 주거복합화, 업무시설의 주거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도시공간의 주택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런던도 대규모 개발과 소규모·분산형 공급을 병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노후·저이용 건축물의 용도 전환, 소규모 정비, 증축, 역세권과 상업지역의 주거복합화, 유희·저이용 부지의 개발 등 기성시가지에서 작은 공급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편적인 주택공급 제도개선을 넘어 도시계획체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함.

- 무엇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역세권 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개별적인 제도를 각각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임.
- 주택공급은 토지의 확보와 사업성뿐 아니라 용도지역, 개발밀도, 교통 접근성, 일자리와 생활서비스의 배치,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공공기여, 부담가능성 및 지역사회의 수용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임.
- 따라서 개별 규제를 필요에 따라 완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가 장래에 필요한 주택과 일자리, 생활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적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이용·용도·밀도·교통·기반시설·공공기여·개발절차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재설계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혁신이 필요함.

● 특히, 국내 주택정책은 시장 불안이나 공급부족이 발생할 때마다 특정 지역의 규제 완화나 공급목표 확대 등 단기적인 대응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에는 도시 전체의 주택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 요구됨.

- 신규 택지와 대규모 정비사업뿐 아니라 역세권·상업지역·업무지역·공업지역·저층주거지·노후주택·저이용 건축물 등 기존 도시공간 전체를 잠재적인 주택공급 자원으로 보고, 각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개발과 정비방식을 마련해야 함.
-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도 ‘몇 호를 공급할 것인가’라는 공급목표 중심에서 ‘도시의 어느 공간에 어떠한 밀도와 기능을 부여하고, 어떤 주택을 일자리·교통·생활서비스·기반시설과 함께 공급할 것인가’라는 도시계획 관점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공급 확대는 개별적인 주택정책의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기존 도시공간의 이용방식과 개발규칙 자체를 재설계하는 도시계획체계의 대전환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캐나다의 대형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체계와 시사점

- Major Projects Office와 PwC 주요 프로젝트 관리가 시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의 필요성 -

박희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캐나다, 대규모 건설사업의 신속 추진 및 통합적 조정기구 ‘MPO’ 신설

- 지난해 8월 캐나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사무국(Major Projects Office, MPO)을 신설하여, 대형 인프라·에너지·자원개발 사업의 복잡한 규제와 관계기관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 MPO는 총리와 내각을 보좌하는 연방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Privy Council Office의 지원을 받는 특별 운영기관으로, 국가 경제의 연결성 강화, 산업 및 교역 다변화,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Nation-Building Projects)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MPO 설립 배경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복잡한 연방 규제·승인 절차, 중앙정부와 주 정부 간 중복 심사, 현지 주민 협의, 대규모 민간자본 조달 등으로 인한 사업 준비 및 승인 기간의 장기화 문제 등이 있음.
- 캐나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단일 접점(Single Point of Contact)으로 MPO를 두고, 사업제안자가 다수 연방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대신 MPO가 관계기관과의 규제·재정·사업 추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 1〉 캐나다 Major Projects Office의 주요 기능

구분		주요 사항
조직 성격		총리·내각 보좌기관인 Privy Council Office 지원 특별 운영기관
추진 목표		국가 핵심사업의 연방 규제·승인 의사결정 신속화, 투자 불확실성 완화
기본 역할	규제, 인·허가	연방 승인절차 간소화 및 관계기관 조정
	사업 조정	연방·주·준주·현지 주민·민간 기업 간 협업
	금융 지원	필요시 프로젝트 금융구조 및 자원조달 조정
사업 선정		국가적 이익, 경제효과, 실행가능성, 현지 주민 이익, 청정 성장 등 고려

자료 : Government of Canada (2025).

- 따라서 MPO의 역할은 개별사업을 직접 발주·관리하는 전통적인 사업관리기관이라기보다,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의 규제·재원·이해관계자 협의와 정부 의사결정 조정을 지원하는 실행조직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캐나다 정부는 주요 프로젝트의 규제 검토와 승인 기간을 착수부터 완료까지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중복절차를 줄이는 “One Project, One Review”를 추진하고 있음.

● MPO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한 개별 프로젝트뿐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군’을 선별, 집중지원하여, 규제·금융·정부기관 간 조정을 통해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함.

-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 판단은 ① 경제적·안보적 자립과 회복탄력성 강화, ② 국가 경제 편익, ③ 사업의 실행 가능성, ④ 현지 주민 이익 증진, ⑤ 청정 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함.
- '26년 9월 기준 MPO 홈페이지에는 18개 프로젝트와 8개 혁신 전략이 제시되어 있으며 철도·LNG·원전·송전망·핵심 광물·항만·도로 등으로 다양하며 독립적인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 국가 에너지 전략, 핵심 광물 전략, 무역통로 및 북극개발 등 다른 국가전략과 연계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함.
- 예를 들어 송전 인프라 구축 사업인 North Coast Transmission Line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북서부의 핵심 광물 개발·LNG 사업을 뒷받침하는 전력 인프라로 계획되어 개별 송전사업을 넘어 지역 산업개발의 기반시설 역할을 수행하므로, 항만·광산·에너지 프로젝트 간 연계성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게 됨.

〈표 2〉 캐나다 MPO의 핵심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 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 연계 분야
원전·전력	Darlington New Nuclear Project	SMR 상용화, 전력공급 확대, 원자력 공급망 활성화
송전	North Coast Transmission Line	LNG·핵심 광물 개발 지원, 청정 전력 공급
항만	Roberts Bank Terminal 2	서부 수출입 물류능력 확대
고속철도	Alto High-Speed Rail	주요 도시권 연결성 및 이동성 개선
도로·북극 인프라	Arctic Economic and Security Corridor	북극 안보, 자원 접근성, 지역경제 강화
핵심 광물	Red Chris Mine Expansion	광물생산 확대 및 공급망 안전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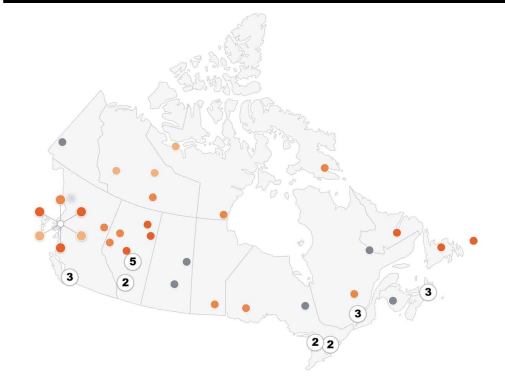
자료 : Government of Canada, Major Projects Office (2026)., PwC Canada (2026).

PwC,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시스템 관점의 포트폴리오 관리 제안

- PwC는 캐나다 주요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과 상호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웹기반 프로젝트 플랫폼 「Advancing Canada's Major Projects」를 공개하며,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수 대규모 건설사업을 개별 자산이 아닌 에너지·교통·디지털·자원·공급망을 연계한 통합 시스템 관점에서 관리해야 함을 강조함.

- 2026년 Canada Investment Summit에서는 에너지·핵심 광물·교통·첨단제조·디지털 인프라·국방 등 165개 이상의 국가적 프로젝트가 논의되었으며, 캐나다 정부는 약 2,8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공공자본·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총 CA\$1조 규모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PwC는 2050년까지 캐나다가 추진 예정인 인프라 투자는 US\$4조 7천억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캐나다가 대규모 국가 인프라 투자 확대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⁵⁾,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계획, 금융,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 실행, 인력, 리스크관리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특히 최근 대형 프로젝트는 교통, 에너지, 디지털 네트워크, 천연자원, 공급망과 지역사회를 동시에 연결하면서 개별 자산의 가치보다 여러 프로젝트와 인프라가 결합된 생태계 전체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PwC는 MPO 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한 주요 프로젝트 53개를 선정하고 사업 위치, 유형, 투자 규모, 추진단계, MPO의 지원 대상 여부, 운영시기, 전략적 중요성 등을 프로젝트 맵에서 제시하였으며, 2026년 9월 기준 에너지 17개, 전력 16개, 인프라 10개, 광업 10개 프로젝트가 포함됨(〈그림 1〉).

〈그림 1〉 캐나다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표 3〉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 구성

분야	개수	주요 특징
에너지	17	LNG, 수소, 에너지 수출 인프라 등
전력	16	원전, 수력, 송전망 등
인프라	10	철도, 항만, 도로, 북극 인프라 등
광업	10	핵심 광물 및 전략광물 개발
소계	53	MPO 지원 대상 사업 및 주요 대규모 사업

자료 : PwC Canada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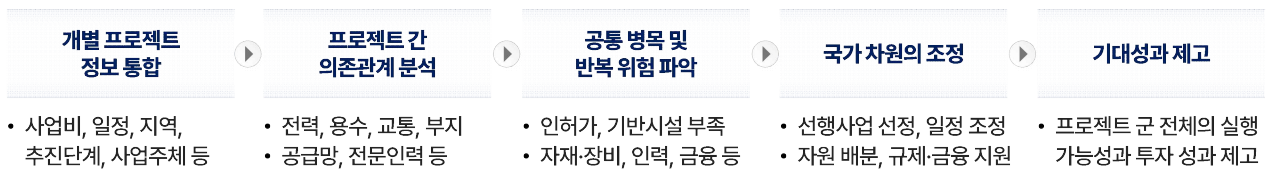
- PwC가 제안한 포트폴리오 관리의 핵심은 개별 프로젝트의 공사비·공기 등 성과뿐 아니라 복수의 프로젝트가 공유하는 인프라, 인력, 공급망, 규제, 금융의 제약을 함께 파악하여 프로젝트 간 의존관계와 공통 병목을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하는 데에 있음.
- 예를 들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시설은 사업 부지 확보만으로 추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전력·용수·통신 인프라와 전문인력 및 협력업체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므로 개별사업의 추진속도와 성과가 다른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일정과 직접 연결될 수 있음.
- 광산 개발사업 역시 생산시설만으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우며, 접근 도로·철도·항만·송전망 등

5) PwC Canada (2026) Mobilizing Canada's US\$4.7T Infrastructure Opportunity :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2050-Canadian Insights.

연계 인프라가 적시에 구축되는지가 전체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경제성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개별 사업자가 개별 프로젝트의 일정만 최적화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동일한 전문인력과 건설 자재·장비를 여러 사업이 동시에 필요로 하거나, 특정 송전망·항만·용수시설의 준공 지연으로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특정 사업의 지연뿐만 아니라 어떤 공통 제약요인이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지연시키고 있는지, 어떤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전체 프로젝트군의 성과가 높아지는가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2〉 국가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개념



차기 국가 핵심 성장동력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시스템 관점의 종합적 추진 및 관리체계 필요

- 지난 6월,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고 대규모 민간투자자와 정부 지원을 결합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
 - 반도체 분야에서는 서남권 대규모 생산거점과 충청권 패키징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는 5개 권역에 초거대 AIDC를 구축하고,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로봇·제조업과 AI를 결합한 지역별 성장축을 조성하는 계획이 제시됨.
 -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규제완화 및 재정·세제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개최된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하여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점검하는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프로젝트간 연계 인프라와 병목을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관련 사업의 규모와 참여기관, 프로젝트 간 연계관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여러 지역과 사업자가 동시에 참여하고, 전력·용수·교통·공급망·인력 등 자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PwC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관점의 관리가 필요함.

- (전담조직의 역할 구체화) 정부가 마련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담조직은 진행상황 점검에 더해 프로젝트 간 공통 위험과 병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국내 전담조직의 범부처 조정 및 실행지원 기능의 설계에 있어 캐나다 MPO의 단일 점검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메가프로젝트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반도체·AIDC·피지컬 AI 등 관련 개별사업의 위치, 투자 규모, 추진 단계, 사업주체, 착공·운영시점과 함께 전력·용수·교통·인력 등 선행 조건을 하나의 정보체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개별사업의 정보를 동일한 구조로 제시하면, 여러 프로젝트의 일정과 투자집중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고 특정 기반시설의 지연이 어떤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이 가능함.
 - (공통 병목의 선제적 관리) 세 프로젝트 모두 대규모 전력과 전문인력, 첨단장비·부품 공급망을 필요로 하므로 각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면 동일 자원의 확보 경쟁이나 투자시점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개별사업별 애로사항을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전력, 용수, 인력, 자재, 인·허가 등 복수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제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접근을 검토할 수 있음.
 - (선행 인프라 중심의 투자 순서 조정) 메가프로젝트 성과는 핵심 생산시설의 투자규모뿐 아니라 송전망, 용수시설, 도로·철도, 데이터망 등 선행 인프라의 적기 공급에 영향을 받음. 개별사업의 착공순서가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군의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어떤 기반시설을 우선 확보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한 활용 영역이 될 수 있음.
 - (프로젝트 간 파급·연계효과 관리) 반도체 생산거점,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는 서로 독립된 산업 정책이 아니라 AI 연산능력, 첨단반도체, 제조·로봇을 상호 활용하는 구조를 가짐. 따라서 사업별 직접 성과뿐 아니라 프로젝트 간 기술·수요·인력·지역산업의 연계효과를 함께 검토하여 3대 프로젝트를 하나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캐나다 사례가 국내에 주는 핵심적인 시사점은 MPO 조직보다는 국가 성장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복수의 프로젝트 정보를 한데 모아 프로젝트 간 연계 관계와 공통 제약을 파악해 정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식에 있음.
- 우리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전담조직과 민관합동 점검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개별 투자계획의 진도관리뿐 아니라 반도체·AIDC·피지컬 AI 관련 프로젝트군 전체의 통합관리체제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개별 사업현황 통합 → 사업 간 의존관계 파악 → 공통 병목 및 반복 위험 분석 → 선행 인프라와 지원 우선순위 조정 → 추진성과 축적·환류의 구조는 PwC가 강조하는 통합 인프라 관점을 국내 메가프로젝트 관리에 응용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전력·용수 등 투자 병목의 조기 발견, 사업 간 일정 충돌 완화, 관계부처 의사결정 조정, 한정된 재정·인력·인프라의 효율적 배분, 반복 위험의 저감과 후속 사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검토할 수 있음.



산업 전환기, 건설인력 재교육 강화 필요

- 유럽의 건설인력 전략 「Construction Blueprint 2」에서 제시한 건설인력 시급 역량과 과제⁶⁾-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녹색·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럽 건설산업의 인력 과제

- 유럽 건설산업은 신규 인력 유입이 감소해 온 가운데, 기술 및 환경 규제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유럽 주요국은 숙련 인력의 은퇴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
 - 여기에 유럽연합(EU)은 기후중립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디지털 전환을 핵심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에너지효율지침(EED), EU 탄소노미,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등 관련 제도를 통해 건설산업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설인력이 기초 직무 역량은 물론 친환경 시공과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Construction Blueprint 2’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설인력의 역량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유럽 차원의 협력사업임.
 - 스페인 건설노동재단(FLC)이 주관하고, 유럽 주요 건설단체(FIEC, EFBWW, EBC)와 10개국의 건설산업계, 노동계, 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하여 건설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8월 발간된 ‘기존 건설 직종의 시급한 역량 수요’⁷⁾ 보고서는 현장에서 시급히 보완해야 할 직무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재직자를 위한 계속직업교육훈련(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cVET) 과정 개발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보고서는 국가별 분석을 통해 유럽 건설인력의 주요 문제로 청년층 유입 부족, 외국인력 의존 확대,

6) 본 브리핑은 EU Construction Blueprint 2 컨소시엄이 2025년 8월 발간한 ‘Report on urgent skills needs in current occupations’를 통해 유럽 건설인력 현황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함.

7) Construction Blueprint 2 Consortium(2025. 8. 31), Report on urgent skills needs in current occupations.

기존 인력의 역량 격차를 제시함.

- 고강도 노동, 열악한 근무시간과 임금, 부정적 직업 인식으로 청년층이 진입을 기피하면서,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졸업생 수도 감소함. 스페인은 2009년 금융위기로 건설인력 약 100만 명이 이탈한 이후 청년층 비중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독일은 건설기업의 81%가 숙련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언급됨.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서유럽으로의 숙련공 유출과 고령화에 따라 비유럽권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언어 장벽과 기초 디지털 역량 부족이 새로운 교육 과제로 부상함.
- 신기술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기초 직무 능력의 부재도 문제가 됨. 스페인에서는 기초 수리와 도면 해독 능력 부족이 지적되었고, 루마니아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시공, 디지털 업무방식에 맞춘 추가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의 변화에 맞춰 재직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려는 유럽의 사례는 국내 건설인력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함.

- 고령화와 청년 유입 부족, 외국인력 의존 확대라는 유럽의 상황은 국내 건설산업과도 유사하며, 기존 인력의 녹색·디지털 전환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동일함.
- 다만, 국내는 건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감소의 문제도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건설기업과 고용이 불안정한 재직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정책이 중요함.

역량 보완이 시급한 10개 직종과 미래 핵심 역량

● ‘Construction Blueprint 2’ 보고서는 건설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역량 보완이 가장 시급한 10개 직종을 <표 1>과 같이 선정함.

- 유럽의 54개 건설 직종 중에서 7개국 이상에서 역량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목한 직종을 분석하였으며, 기능직 5개와 기술직 5개를 도출함.
- 기능직에는 목공·창호공, 단열공, 조적공, 건축전기공, 냉난방공조 기술자가, 기술직에는 건설관리자, 토목 엔지니어, 토목 기사, 에너지관리사, 현장총괄감독자가 포함됨.

● 이들 직종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① 친환경 역량(Green skills), ② 디지털 역량(Digital skills), ③ 공통 역량(Transversal skills)의 3가지로 분류됨.

- (친환경 역량)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설비 도입, 친환경 자재 활용, 자원순환 관련 지식과 기술을 설계·시공·관리 전반에 적용하는 능력임. 기능직은 단열 시공과 에너지설비 설치 등 현장 시공 능력, 기술직은 지속가능한 설계와 자원 생애주기 평가 등의 능력이 중시됨.
- (디지털 역량) 디지털 도면, 정밀 측정 장비, 소프트웨어 및 현장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는 능력으로,

직종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활용 범위가 달라짐.

- (공통 역량) 여러 직종에 공통으로 필요한 의사소통, 협업, 문제해결 및 관리 능력임. 특히 기술직에서는 작업팀과의 의사소통, 공정 및 계약관리, 기준 준수 확인, 촉박한 공기 내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력이 중요하게 나타남.

〈표 1〉 역량 보완 우선 직종과 핵심 역량 예시

구분		기능직	기술직
역량 보완 시급 직종		목공·창호공, 단열공, 조적공, 건축전기공, 냉난방공조(HVAC) 기술자	건설관리자, 토목 엔지니어, 토목 기사, 에너지관리사, 현장총괄감독자
핵심 역량	친환경	단열 시공, 태양광·히트펌프 등 에너지설비 취급, 폐기물 해체자재 분류	지속가능한 설계, 자원 생애주기 평가, 순환경제 적용, 에너지 소비·수요 분석, 환경기준 준수
	디지털	2D·3D 도면 해석, 디지털 측정 도구 활용, CNC 장비 운용 등	기술문서·현장정보 관리, BIM을 활용한 업무 조정,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등
	공통	작업기한·안전·기술요건 준수, 팀워크, 문제해결	작업팀과의 의사소통, 공정·계약관리, 작업 조정, 현장 점검, 신속한 상황 대응

자료 : Construction Blueprint 2 Consortium(2025. 8. 31), Report on urgent skills needs in current occupations.

● 또한, 보고서는 향후 중요성이 커질 6대 신규 직무 역량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AI 실무 활용) 공정계획 수립, 예측 유지관리, 물류 관리, 교육훈련 분야의 AI 적용
- (탈현장·모듈러 시공 기술) 모듈러 및 사전제작 건축 기법
- (에너지시스템 및 신재생 기술 통합) 에너지시스템의 스마트 시운전과 태양광·수소·지열·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재생에너지 기술의 통합 적용
- (친환경·첨단 건설 자재 활용) 저탄소 콘크리트, 재생 복합소재 등 차세대 자재 활용
- (디지털·자동화) 건설 공정 내 디지털트윈, 사물인터넷(IoT) 연동, 로봇 기술 도입
- (지속가능성 공시 및 규제 대응) ESG 공시, 탄소 회계 및 EU 탄소노미 규제 준수

재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 10개국의 건설 전문가들은 시장 구조의 변화, 프로젝트 복잡성 증가, 지속된 인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진단함.

- 중소기업은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 업무의 차질 없이 근로자를 교육 훈련에 참여시키는 데에도 큰 한계를 안고 있음.

- 이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재직자의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표 2>와 같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현장 중심의 유연한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함.
- 교육훈련을 위해 종사자를 현장 밖의 집체교육에 투입하기보다, 업무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고, 그 비용은 산업 전체가 공동 부담하는 방향으로 요약됨.

〈표 2〉 재직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방안	주요 제안 내용
유연한 혼합형 교육	▪ 대면 실습과 온라인 이론 교육 결합 ▪ 마이크로러닝과 이동형 교육시설을 활용해 중소기업, 계절근로자, 이주노동자의 교육 접근성 제고
짧은 단위의 정기 교육	▪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짧은 단위로 구성 ▪ 분기 또는 연례 단위의 보수교육 제공
혁신적 교육 방법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등 실감형 기술, 시뮬레이터, 게임화 학습, AI 기반 맞춤형 학습 경로 등 활용
현장 연계 교육	▪ 현장 직무훈련(OJT), 도제훈련, 멘토링, 동료 간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도록 지원
포용적·연계형 접근	▪ 다문화 인력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기존 학습 및 경험의 인정 확대 ▪ 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 기관, 산업계 간 연계 강화
의무 계속직업훈련 및 공동 재원	▪ 교육 접근성 확대와 기업 간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 산업 차원의 계속직업교육훈련 의무와 기금을 통한 교육비용 공동 부담

자료 : Construction Blueprint 2 Consortium(2025. 8. 31), Report on urgent skills needs in current occupations.

국내 건설인력 재교육 체계 개선 방향

-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감소와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고용 규모 유지뿐 아니라 직무 역량 변화에 맞춘 체계적인 재교육이 필요함.
- 건설업 취업자는 2022년 이래 감소해 왔으며, 2026년 9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4만 8천 명 줄어 고용 부진이 이어짐.⁸⁾ 특히 최근 건설기성이 28개월 만에 반등했음에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고용 없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음.⁹⁾ 이러한 고용 부진 장기화로 기존 인력이 산업을 이탈할 경우, 현장의 경험과 숙련 기술을 축적할 인력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큼.
- 또한 신축 중심 시장이 축소되고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 인프라 유지관리, 친환경·스마트건설 비중이 확대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최근에는 AI 등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공

8)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2026.10.16.), ‘26.9월 취업자수 11.3만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수는 27개월만에 증가 전환’.

9) 대한경제(2026. 10. 19), ‘반도체 수출 뒤 건설 일자리 13만개 증발…李정부엔 ‘건설’ 없다’.

정·원가·품질 관리, 계약·기술문서 검토, 현장 모니터링 등 기술직의 업무방식까지 재편되고 있어 기존 경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변화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재직 기술인과 기능인이 이탈하지 않고 역량을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교육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함.

● ① 직종별로 필요한 역량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함.

-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친환경, 디지털, 현장관리 등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직종별 부족 역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시급성에 따라 교육 우선순위를 설정함.
- 기술직의 경우 AI 도입으로 자동화·보조되는 영역과 인간의 고도화된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을 분석하여 직무별 재교육 과정을 재설계하고, 외국인력 및 디지털 취약 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기초 디지털 도구 활용 교육도 병행 지원함.

● ② 업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단기 교육과 현장 학습을 확대함.

-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이론 학습과 현장 실습을 결합한 혼합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공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 등 비수기 집중교육과 현장 방문교육을 운영함.
- 현장 직무훈련(OJT)과 멘토링의 명확한 학습 목표·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단기 교육 이수 결과를 공식 교육 이력으로 인증하여 기존의 기능등급제 및 경력관리 체계와 연계함. 또한 단순 이수 여부가 아닌 현업 활용도, 고용 유지, 재취업 성과를 추적해 교육과정 개편시 반영함.

● ③ 근로자의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고, 재교육의 공동 부담 기반을 마련함.

- 기존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 구직자 양성훈련 위주이고 지원금도 실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개선하여, 일당제 근로자의 교육 참여에 따른 소득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현실화함.
- 자체 교육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 재정 지원과 산업계·노사의 비용 분담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함.

●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기술 혁신 자체보다 그 기술을 활용할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음. 따라서 건설인력 재교육은 개인이나 기업의 선택이 아닌 산업의 기반으로 다뤄야 함.

-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 부진 업종 지원 대책에 건설 재직자 재교육 체계를 주요 축으로 포함해야 함.
- 특히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AI·디지털 기반 업무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인력이 기술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교육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넓혀야 함.